

14 오피니언

사설

‘미니’ 의과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리학교 의과대학이 졸지에 ‘미니’ 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학년도부터 21개 대학이 우리학교보다 많은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구성원 사이에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달 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는 82%에 달하는 1639명이,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서울권 대학은 0명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의 발전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의 발전 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다고 설명했다.

정원 배정의 영향은 우리학교에도 미쳤다. 일부 구성원은 “애초에 증원 신청 규모가 작았던 탓”이라며 본부로 시선을 돌렸고, 본부는 “서울에 위치한 다른

의대 중 큰 규모로 증원 신청을 한 대학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배정받지 못한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규모가 작아서 배정을 못 받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측 의견 모두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의 의미 없는 소모전이다.

의정 대립이 고조되는 사이 경희 구성원을 포함한 국민 상당수는 한 가지를 놓쳤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 이번 정책의 기조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다. 그런데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와 정책 기조 사이에는 함정이 있다.

울산대 의대는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과 본래 정원만 놓고 ‘비수도권 미니 의대’에 가장 부합할지 모른다. 하지만 울산대 의대의 협력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 울

산대 의대생들이 예과 2학년부터 교육과 실습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며 이들 중 90% 이상이 졸업 후 수도권 병원에 근무한다.

성균관대 의대도 마찬가지다. 성균관대는 교육과 실습을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 서대문구의 강북삼성병원에서 진행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대 의대 정원도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늘렸다. 정원 상승률이 250%인 건국대도 충북 충주에 병원이 있지만, 교육 및 실습은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진행된다.

가톨릭관동대(강원)·동국대(경주)·한림대(춘천)·순천향대(아산)는 수도권의 협력병원에 ‘미인가 교육시설’을 설치해 수련병원으로 운영한다. 그 결과, 2014~2023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 9,408명 중 9,067명(46.7%)은 수도권에서 수련을 진행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수도권

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의대 정원 확대’의 기조로 삼은 것일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번 정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전무후무한 의료 대란을 야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의사의 대립, 혹은 ‘증원 규모’에서 벗어나 공공 의료 등 의료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경희 구성원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길을 생각해 보고, 경희인으로서 ‘의대 증원 0명’의 총격에서 벗어나 우리학교 의대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가령, 동료 대다수를 잃어도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병원을 지키는 의사를 길러낼 방법을 말이다.

세시봉

청년의 혼란

김윤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청년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독불 정부’에 고개를 돌리는 선택을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찜찜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원내 제3당으로 입성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청년층에서 여론조사 상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어떤 유권자보다 대입을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청년 유권자에게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어찌하면 당연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있었어도 말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4050에게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정권 심판의 ‘도그마’ 내에서 입시 비리를 용인했다. 조국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큰 이벤트를 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달자마자 이를 상실하게 된다. 지지층도 이를 알고 있지만 대통령과 싸우기 위한 투사로 조국을 지목했다.

청년에게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던 기성의 범진보 세력들이 기존 가치와 대비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조국혁신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청년이 체감하는 정치적 효능감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투표권을 갖게 된 시점부터 정책과 비전보다는 누군가를 억제하고 비방하는 식의 정치를 마주하고, 이를 평범한 현상이라고 금방 오해한다. 사색 유권자인 청년에게 이제 정치적 효능감은 ‘무능력에 대한 심판’이나 ‘도덕성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되며 그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물론 투표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긴 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와 소통이 없는 네거티브와 손가락질로 정치는 변질되고 있다. 이 싸움을 부추긴 것은 정치 본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구도에 적극적으로 들어간 중장년층은 각자 입장에서 싸움에 기름을 붓는다.

20년 후 기성세대가 될 청년층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세대다. 22대 총선으로 원내에 진입한 정당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원내 정당들의 싸움을 종결하고 새로운 정책과 의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길 기원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무전공 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무전공 제도의 미래는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우리학교는 광역모집, 자율전공학부를 운영하며 이미 전공 쏠림현상을 경험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광역모집 최초 합격자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과학광역 합격자 중 약 81%가 경영대학을 선택했으며 생명과학광역 합격자 중 약 95%가 유전생명공학과를 선택했다. 자율전공학부에서는 최근 4년간 경영대학에 가장 많은 학생이 몰렸다. 전공 쏠림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면 특정 학문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포스텍과 한동대, 이화여대는 우리보다 먼저 무전공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례를 우리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학별로 개설된 학과와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모두 무전공 제도를 향한 학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동대 방청록 기획처장은 “학생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학교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포스텍 황병숙 기획팀장 또한 “학생 본인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제도에 학생은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도 무전공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공 쏠림 현상 보완 장치뿐만 아니라 교수, 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충분한 학생 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다양한 전공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애당초 제시한 ‘학과 간 벽 허물기를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무전공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만평 성급한 제도 도입은 학생의 혼란을 야기한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